
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

-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(Ⅱ) -

2020. 5. 20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I . 추진배경	1
II . 추진방향	2
III .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	3
1. 비대면 · 디지털 일자리	3
2. 취약계층 공공일자리	5
3. 청년 디지털 일자리	7
4. 청년 일경험 지원	9
5. 중소 · 중견기업 채용보조금	10
IV . 향후계획	10

I. 추진배경

◆ 제3차 회의에서 발표한 「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(Ⅰ)」의 후속조치로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(55만개)에 대한 추진계획 마련

◇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심화

□ 최근 고용률과 취업자 수의 큰 폭 하락

* 15~64세 고용률(전년비, %): (4월) 65.1(△1.4%p) / 취업자 증가(전년비, 만명): (4월)△47.6

○ 임시·일용직, 자영업자와 여성·청년 등 취약계층 어려움 심화

* 취약계층 취업자 증감('20.3→4월, 전년비, 만명): (임시일용) △59.3→△78.2 (자영업)△7.1→△7.2 (여성) △11.5→△29.3 (청년) △22.9→△24.5

◇ 민간의 일자리 여건 악화

□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세계 공급사슬 파괴 등의 영향으로 민간의 고용 창출 여력이 매우 약화

○ 도소매·숙박음식, 교육 등 '서비스업' 고용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, 4월 수출부진 등으로 제조업 고용충격 확대 우려

* 산업별 취업자 증감('20.3→4월, 전년비, 만명): (서비스)△29.4→△44.4 [(숙박음식) △10.9→△21.2 (도소매)△16.8→△12.3 (교육)△10.0→△13.0] (제조)△2.3→△4.4

* 수출증감율(전년비, %): ('20.1)△6.6 (2) 3.8 (3)△0.7 (4)△24.3 (5.1~10.)△46.3

◇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 역할 필요

□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신속한 일자리 제공이 불가피

□ 아울러, 새롭게 등장하는 IT, 스타트업 등 생산성 높은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일경험 기회 제공 등도 필요

Ⅱ. 추진방향

◇ 비대면·디지털 등으로 변화하는 일자리 수요 적극 반영

-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반의 비대면화와 디지털 변화* 등 급속도로 바뀌어 가는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
 - * 온라인 교육, 비대면 의료, 원격근무 등 비대면 활동 범위 확대
- 공공분야에서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닌 데이터 구축, 콘텐츠 개발 등 공익적 가치 창출에 역점
- 비대면·디지털 분야의 일자리 중 일부는 「한국판 뉴딜*」과 연계
 - * 예) ▲(공공) 중앙·지방·공공기관의 데이터 구축
⇔ (뉴딜) 국민체감도가 큰 분야(교통, 공공 등)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
▲(민간) AI, 빅데이터 등 신산업분야 인력지원 ⇔ (뉴딜) AI 데이터인프라 확충
- 방역·환경보호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

- ① 공공부문의 비대면·디지털 일자리 제공(10만명)
- ② 실직자, 휴·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일자리 확대(30만명)

◇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 일자리 기회 제공

- 민간성장 분야에서 청년은 직무 경험을 쌓고, 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유도
- 청년일자리 중 민간부문의 중요사업은 '21년 계속추진 검토
 -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일경험 사업 참여 이후 정규직 전환시 '청년추가고용장려금*' 및 '청년내일채움공제**' 연계 지원

* 청년을 정규직 채용하여 근로자 수 순증 시 1인당 연간 900만원(최대 3년) 지원

** 정규직 취업 청년, 기업, 정부 공동적립을 통해 2년간 1,600만원 자산형성

- ③ IT 활용 가능한 민간 일자리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(5만명)
- ④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의 인건비 지원(5만명)
- 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이직한 자를 채용 시 보조금 지급(5만명)

Ⅲ.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계획

※ 구체적인 사업 인원 및 금액 등은 3차 추경안 편성 및 국회 논의에 따라 변동 가능

[공공부문]

1. 비대면·디지털 일자리(10만명, +1조원)

- (개요) 공공분야에서 공익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청년층 경력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비대면·디지털 일자리 제공
 - (대상) 청년·여성, 실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(IT 분야는 청년 중심)
 - (근로조건) 주15~40시간, 6개월 이내, 최저임금 보장, 사회보험 가입 등
- (유형) ①디지털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, ②코로나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강화
 - 총 17개 부처(55개 사업)에서 10만개 일자리사업 추진
 - ① 디지털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(6.4만명, 7,900억원)
 - 디지털경제 기반 데이터 구축(3.4만명, 4,900억원) : 공공데이터 구축, 온라인 업무 및 교육 등을 위한 도구 개발·품질 관리 등

부 처	사업내용	인원(명)
과기부	- 클라우드 소싱(집단 참여) 기반 AI 학습용 데이터 Set 구축	20,000
	- 대학·연구소의 바이오 분야 연구 데이터 디지털 전환	2,000
	- 과학기술 논문, 연구보고서 등 머신러닝 용 데이터 셋 구축	2,000
행안부	- 중앙·지방·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구축·개방·품질향상	8,950
교육부	- 재정지원 대학 부설 연구소 연구데이터 수집·정리·가공	912
농진청	- 스마트팜 관련 생육 데이터구축 등	500

- 비대면·디지털 산업 육성 기반 조성(1.9만명, 2,100억원) : 교육·문화산업 등 분야별 디지털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관련 교육

부 처	사업내용	인원(명)
과기부	-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	1,950
복지부	- 의료서비스 취약계층 대상 방문 건강관리 및 비대면 원격 협진	1,024
교육부	- 대학 및 초·중고 온라인 강의·교육 지원	8,200
문체부	- 문화산업 육성 관련 콘텐츠 조성	5,846
중기부 농진청	- 전통시장 마케팅, 농업 분야 비대면 교육·홍보 콘텐츠 조성 등	1,780

- IT기반 행정서비스 구축(1.1만명, 900억원) : 안전·보건·공공 기록물 및 시설물 등 행정서비스 DB 구축

부 처	사업내용	인원(명)
국토부	-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DB구축	2,300
고용부	- 효율적 산재예방 정책 수행을 위한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	2,250
	- 지역 사회적 경제 생태계 자원 조사 및 DB 구축	1,700
과기부	- 대학·연구기관 연구실 취급 유해물 전수조사 및 DB 구축	660
법제처	- '05년 이전 공포 법령의 별표·서식 DB화	102

② 코로나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한 비대면 행정서비스(3.6만명, 2,400억원)

- 코로나 피해업종 조기회복 집중 지원(24만명, 1,800억원) : 문화예술·공연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산업 지원, 방역 등 필수사업 확대

부 처	사업내용	인원(명)
문체부 복지부	- 관광지, 소규모 공연장, 의료기관 등 방역	12,229
문체부	-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문화예술계 지원	11,559

- 코로나 이후 수요 증가 행정서비스(1.2만명, 600억원) : 1회용품 사용 증가 등에 따른 재활용 업무·안전점검 업무 등

부 처	사업내용	인원(명)
환경부	- 코로나로 인해 급증한 1회용품 재활용 지원 등	10,843
특허청 환경부	- 지적재산권, 환경표지 인증 무단 사용 감시 등 온라인 모니터링	550
농식품부 산림청 환경부	- 드론 활용 공공시설 방역 및 안전 조사	456

- ☐ (신청) 고용부에서 모든 사업을 묶어 6월중 통합공고* 실시, 각 사업 소관 기관에서도 모집공고 후 7월중 사업 실시(잠정)

* 고용부 홈페이지 및 워크넷(공공 취업지원사이트) 활용

2. 취약계층 공공일자리(30만명, +1.5조원(국비90%))

- (개요) 취약계층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243개
 전 지방자치단체가 수요를 파악하여 설계한 공공일자리 제공
 - (대상) 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
 - * 저소득층, 실직자, 휴·폐업자 등 우선선발, 사업 특성에 따라 청년도 우대
 - (근로조건) 주15~30시간 원칙(최대 40시간), 5개월 이내, 최저임금 보장 등
- (유형)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생활방역, 골목상권 회복, 농·어촌
 경제활동 지원 등 10개 유형
 - 전국 지자체에서 유형 분류에 따라 30만개 일자리사업 추진
 - ① 생활방역 지원: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 등
 - * 총인원 : 78,200명, 사업수 : 845개, 국비 : 3,930억원

주요 사업 사례

(서울) 공공자전거 따릉이 방역단, (대구) 교통시설, 어린이집 등 방역 지원
 (경기 파주시) 공공청사 및 경로당 등 방역, (전북 익산시) 보건소 생활방역 지원

② 골목상권 회복 지원: 전통시장 유통 지원, 소비 촉진 등

* 총인원 : 3,900명, 사업수 : 108개, 국비 : 196억원

주요 사업 사례

(서울 종로구) 전통시장 소상공인 활성화 홍보 지원 (전북 군산시)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지원
 (부산 부산진구)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지원, (전남 영암군) 골목상권 모니터링

③ 농·어촌 경제활동 지원 : 농·어가 일손 돕기, 지역 환경 정비 등

* 총인원 : 18,200명, 사업수 : 324개, 국비 : 915억원

주요 사업 사례

(울산 울주군) 농업기반시설 환경 정비, (충북 증평군) 농촌지역 환경 개선
 (충남 태안군) 농어가 일손돕기, (제주 제주시) 해안 및 항만환경 개선

④ 공공휴식공간 개선: 공원·체육시설 개선, 관광명소 조성지원 등

* 총인원 : 40,700명, 사업수 : 912개, 국비 : 2,045억원

주요 사업 사례

(부산 동래구) 안전하고 걷고 싶은 산책로 조성, (광주 광산구) 깨끗한 시가지 만들기
 (강원 횡성군) 마을 휴식공간 정비 및 유지관리, (제주 제주시) 시민호관 문화의 집 등 환경 개선

⑤ 문화·예술 환경 개선: 문화·예술 활동 관련 인프라·환경 정비 등

* 총인원 : 14,600명, 사업수 : 481개, 국비 : 734억원

주요 사업 사례

(대전) 지역 축제 준비 지원, (전북 전주시) 박물관, 미술관 등 환경 정비·개선
(충남 보령시) 문화재 관람 안내 및 환경관리, (경기 동두천시) 문화·예술 환경 개선

⑥ 공공업무 긴급 지원: 지역 현안 수요가 있는 행정분야 지원 등

* 총인원 : 45,200명, 사업수 : 1,238개, 국비 : 2,271억원

주요 사업 사례

(서울) 주민센터 프로그램 접수 지원, (세종) 민원서류 작성 안내
(인천 중구) 문서 기록물 분류 지원, (대전 대덕구) 도서관, 교육 등 공공업무 지원

⑦ 산업지역 환경 정비: 영세기업체 밀집지역 정비 등

* 총인원 : 19,300명, 사업수 : 283개, 국비 : 970억원

주요 사업 사례

(인천 서구) 검단산업단지 가꾸기, (경기 동두천시) 기업체 밀집지역 개선
(전남 순천시) 해룡산단 환경정비, (경남 창원시) 공업지역 등 환경 정비

⑧ 재해예방: 산불·풍수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 지원 등

* 총인원 : 6,000명, 사업수 : 161개, 국비 : 301억원

주요 사업 사례

(부산 동래구) 산림재해 예방, (대전 중구) 여름철 물놀이 안전예방 사업
(강원 동해시) 재난취약지구 안전요원 배치, (충북 제천시) 산불예방 및 하천 정비 지원

⑨ 청년지원: 청년에게 한시적인 직접 일자리 제공

* 총인원 : 17,400명, 사업수 : 411개, 국비 : 874억원

주요 사업 사례

(서울) 소프트웨어 테스트 지원, (광주) 기록물 전산화 등 DB구축
(대전) 안전 관련 홍보자료 제작 등, (전남 순천시) 청년 일자리 DB 정비단 운영

⑩ 지자체 특성화 사업 등: 비대면, 지역 맞춤형 특화 일자리 등

* 총인원 : 56,500명, 사업수 : 572개, 국비 : 2,840억원

주요 사업 사례

(부산 연제구)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지킴이, (경기 의왕시) 면 마스크 제작 사업
(전남 담양군) 담양형 생태정원 조성, (경남 창원시) 도심속 녹색공간 만들기

- ☐ (신청) 사업 시행 지방자치단체(광역시·기초)의 홈페이지 및 워크넷
(공공 취업지원사이트) 활용하여 7월중(잠정) 별도 공고 예정

[민간부문]

3. 청년 디지털 일자리(5만명, +0.5조원)

□ (개요) 중소·중견기업에서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

○ (대상) ▲ 만 15~34세 미취업 청년 ▲ 5인 이상 중견·중소기업*

* 벤처기업, 지식서비스, 문화콘텐츠,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

○ (근로조건) 주 15~40시간, 최저임금 이상 지급, 4대보험 가입 등

○ (지원)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(임금수준에 비례) 및 간접 노무비 10만원 추가 지원

* 월 보수 총액: ▲ 200만원 이상 → 180만원 + 10만원 지원

▲ 200만원 미만 → 지급임금의 90% + 10만원 지원

□ (운영체계) 청년이 IT 관련 직무 경험을 쌓고, 기업은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유도

○ (협·단체 활용, 2만명) 스타트업 디지털 역량 강화,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일부 특화 분야는 전문성 높은 협회·단체 등을 통해 사업 운영(既발굴)

▲ 신산업·에듀테크 등 스타트업 디지털 역량 강화: 창업진흥원(중기부, 1,000명)

▲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테스트 및 검수: 중소기업진흥공단(중기부, 1,000명)

▲ 공연작품 디지털 전환 지원: 예술경영지원센터(문체부, 500명)

▲ 비대면 회의기술 활용 사례 개발지원: 한국마이스협회 등(문체부, 400명)

○ (민간운영기관 활용, 3만명) 민간기업의 일자리 수요를 발굴 하여 청년에게 IT 활용 가능한 직무로의 취업기회 제공

□ (채용유형) 기업에서 신청 시 채용분야를 유형별*로 구분·제출 하도록 하여 단순반복적인 업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사례를 사전 예방

* ①콘텐츠 기획(홈페이지·유튜브·SNS 등 온라인 분야 기획·관리·운영)

②빅데이터 활용(AI, 앱개발, 빅데이터 분석 등 신산업 분야)

③기록물 정보화(기업내 아날로그 문서 등 전산화 및 DB화 등)

④기타 IT직무(그 외 기업별 특화한 IT 활용 직무)

< 참고 : 특화분야 및 관련 기관(예시)>

특화분야	기관(부처)	인원(명)	예산 (백만원)
- 미술 작품 디지털화	- 예술경영지원센터(문체부)	750	6,750
- 공연작품 디지털 사업	- 예술경영지원센터(문체부)	500	4,500
- 마이스 전문인력 역량 강화	- 한국마이스협회(문체부)	400	3,600
- 방송영상콘텐츠 제작현장 일자리 지원	-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(문체부)	900	8,100
- 출판물 디지털화	-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(문체부)	50	450
- 신한류 연계 중소기업 온라인경쟁력 강화	- 한국콘텐츠진흥원(문체부)	1,000	9,000
- 소프트웨어 테스트 및 검수업무 지원	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중기부)	1,000	9,000
-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지원	- 벤처기업협회(중기부)	1,000	9,000
- 중소 서비스업 디지털 서포터즈	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중기부)	1,000	9,000
- 스마트공장 제조현장 디지털화 등	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중기부)	1,000	9,000
- 디지털 헬스케어 신제품 마케팅 지원	- 한국바이오협회(중기부)	300	2,700
- 비대면 산업 온라인 교육 등 스타트업 지원	- 창업진흥원(중기부)	1,000	9,000
- 소프트웨어 개발 보조, 타겟 마케팅 등	- 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(중기부)	2,000	18,000
- AI, 빅데이터, IoT 등 신산업 기술분야	- 코리아스타트업포럼(중기부)	1,000	9,000
-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분야	- 벤처기업협회(중기부)	2,000	18,000
- AI 학습용 데이터 작성 인력 지원	- 지능정보산업협회(중기부)	1,000	9,000
- 소셜벤처기업 디지털 청년 일자리	-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(중기부)	250	2,250
-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디지털 지원	- 한국농어촌공사(농식품부)	660	5,940
- 중소 농식품 기업 디지털 마케터 지원	- 식품산업협회(농식품부)	200	1,800
- 중소 외식기업 국내외 시장조사 지원 등	- 외식산업협회(농식품부)	100	900
- 농식품 벤처창업 청년 일자리 지원	- 농업기술실용화재단(농식품부)	207	1,863
- 스마트팜 청년 일자리 지원	-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(농식품부)	50	450
- 제주혁신성장센터 내 창업기업 지원	-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(국토부)	74	666
- 중소환경기업 환경기술·설비 디지털화	- 한국환경산업기술원(환경부)	1,000	9,000
- 병원원 전자의무기록(EMR) 프로그램 표준화	- 한국보건의료정보원(복지부)	1,205	10,845
- 수산기업 온라인(비대면) 마케팅 지원	- 협의중(해수부)	200	1,800
- 디지털 산업·직무 중견기업 일자리 창출	- 중견기업연합회(산업부)	150	1,350
- 미래차, 지능형 로봇 등 신기술 분야	- 한국산업기술진흥원(산업부)	400	3,600
합 계		19,396	174,564

4. 청년 일경험 지원(5만명, +0.24조원)

- (개요) 최근 신규채용 연기·중단 등으로 일할 기회가 감소한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
 - (대상) ▲만 15~34세 청년(대학생 참여 가능)
 ▲5인 이상 중견·중소기업*(직무 분야 제한 없음)
 * 벤처기업, 지식서비스, 문화콘텐츠,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
 - (근로조건) 주 15~40시간, 최저임금 이상 지급, 4대보험 가입 등
 - 청년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의 전담 멘토 지정, 업무지도·교육 등 내실있는 운영 지원
 - (지원) 청년의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80만원의 인건비*와 관리비 10% 추가지원
 * 40~30시간: 80만원, 29~20시간: 60만원, 19~15시간: 40만원
- (운영체계) 청년은 일경험을 쌓고, 기업은 채용여력 확보 유도
 - (협·단체 활용, 0.7만명) 관광·호텔 분야 지원, 업사이클 기업 등 일부 특화 분야는 전문성 높은 협회·단체 등을 통해 사업 운영(既발굴)
 - (민간운영기관 활용, 4.3만명) 특화 분야를 제외한 민간기업 수요는 운영기관을 통해 발굴,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 제공

< 특화분야 및 관련 기관(예시) >

특화분야	기관 (관련부처)	인원(명)	예산(백만원)
- 관광-ICT 융합인력 지원	- 한국관광공사(문체부)	100	480
- 호텔 실습 분야	- 관광공사, 호텔업협회(문체부)	2,100	10,080
- 관광전공 미취업실직 청년 지원	- 관광공사, 여행업협회(문체부)	1,000	4,800
- 출판물 발간 분야	- 출판문화산업진흥원(문체부)	50	240
- 태권도 경력 청년 일자리 지원	- 대한태권도협회 등(문체부)	850	4,080
- 중소 환경기업 분야	- 한국환경산업협회(환경부)	1,000	4,800
- 업사이클 기업 분야	- 한국환경산업협회(환경부)	100	480
- 중견기업 분야	- 중견기업연합회(산업부)	200	960
- 예비사회복지사 청년 등 지원	-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등(복지부)	100	480
- 사회적기업 일자리	- 사회적기업진흥원 등(고용부)	300	1,440
- 청년여성 인턴 지원	- 한국여성경제인협회(여가부)	800	3,840
- 물류기업	- 한국통합물류협회 등(국토부)	100	480
- 소셜벤처기업 청년 인턴 지원	- 기업가정신재단(중기부)	150	720
-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등	- 대한화장품협회(식약처)	300	1,440
합 계		7,150	34,320

5. 중소·중견기업 채용보조금(5만명, +0.3조원)

- (개요) 코로나19 확산 등 고용상황이 특별히 악화된 시기에
이직한 구직자 등을 고용한 중소·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 지원
 - ➡ 기존 '고용촉진장려금'에 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고,
지원금액을 상향하여 기업의 신규채용 노력 적극 지원
- (대상) ▲코로나19 확산(예: '20.1월) 이후 이직하여 일정기간
(예: 3개월) 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자 등
 - ▲6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
- *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은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사업주 대상
- (지원) 최대 6개월 간 중소기업 월 100만원, 중견기업 월 80만원
 - *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 60만원, 대규모기업 30만원 지원
- (신청) 고용센터에 신청, 별도 사업 공고 예정
 - * 현재 사업근거 및 주요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(5.13~20)

IV. 향후 계획

-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 과제는 3차 추경안(6月初)에 반영
 - 3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 신속한 시행을 위한 준비 철저
- 일자리촉 중심으로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과제 점검 추진

- (비대면·디지털 일자리) '공공일자리 창출 TF'(일자리위 주관)을 통한 관리
- (취약계층 공공 일자리) '자치단체 일자리책임관' 협의체(행안부 주관)를 통한 관리
- (청년 일자리) '청년일자리 사업 운영위원회'(고용부 주관)를 구성하여 관리